

# 미국 대선 후보의 사회정책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11월 대선에 나설 두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 예비선거에서 젊은 층이 주를 이룬 샌더스 지지자들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으며, 비록 후보 경선에서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좌측으로 더 기울이는데는 성공했다.

## 극보수와 극진보의 대결구도가 된 미국 대선

지난 26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11월 대선에 나설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예비선거는 미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공화당은 극우파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했으며, 진보에서는 비록 중도 좌파 성향의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예비선거에서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극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정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 분열된 미국 사회

2014년 실시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정치적 이념 차이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오늘날과 같이 컸던 적이 없다. 지난 20년 사이 진보나 보수의 한 쪽 입장만을 고집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21%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오늘날 전형적 공화당원은 민주당원 94%보다 보수적이고, 전형적 민주당원은 공화당원 92%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도 증가해 공화당원 36%와 민주당원 27%가(1994년에 각각 17%와 16%) 상대 당의 정책이 국가에 해롭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거나 상대 당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에 더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념적 양극화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케어'의 도입과 여타의 최근 정책 변화는 미국 사회의 급속한 진보화를 의미한다. 반면에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교육·환경 부문에서 미국에는 아직 변해야 할 것이 많다.

## 화가 난 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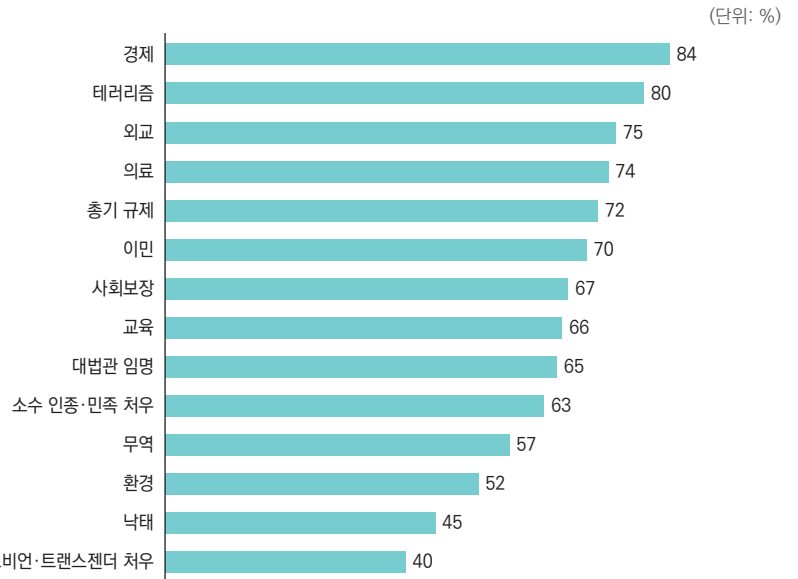
2015년 12월에 실시된 CNN/ORC 조사에서 미국인 69%가 미국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 혹은 "다소 화가 나 있다"고 응답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거버넌스 전문가 윌리엄 갤스톤(William Galston)은 미국인이 화가 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15년간 미국 경제가 중산층과 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08년 대침체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는(2009년 10%에서 2015년 5%로) 등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의 중위가구 실질 소득은 2007년 수준에서 거의 4천 달러가 모자란다. 새천년 세대(millennials)로 불리는 젊은 층은 치솟는 학자금 부채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취업경쟁으로 시름에 잠겨 있다.

그간 대선 후보자들은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소득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되 특히 민주당이 채택한 사회 부문 정강·정책을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 유권자 선호 조사**

한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유권자 선호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긴 이슈는 경제(84%), 테러리즘(80%), 외교(75%), 의료(74%), 총기규제(72%), 이민(70%), 사회보장(67%), 교육(66%)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6년 미국 대선 유권자의 우선순위 분야



자료: 퓨리서치센터

트럼프는 11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강간범”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남부 국경에 “아름다운 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의 사회 부문 주요 정책안**

트럼프는 11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강간범”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남부 국경에 “아름다운 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이민정책**

트럼프는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유색인종의 투표권 축소를 위해 미국 출생 시민권제도를 폐지하며, 멕시코 정부의 재정을 재원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국 투표권자의 70%가 백인이며 보수층에 속하는 45세 이상인 투표 참여자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스스로 없이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조세정책**

트럼프는 대체에너지 투자와 환경보호 자금을 과감히 축소하고, 절세를 장려하는 조세정책을 내놓았다. 어찌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사람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이 보수진영의 환호를 얻었다. 기업인 출신인 그는 법인세율을 현 38%에서 15%로 인하하고, 현재 39.5%인 개인 사업체 및 소규모 사업체 세율도 15%로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폐지함으로써 높은 세금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 사업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7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4개로 단순화한다는 내용의 개인소득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가구는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 전체 가구의 50% 가량이 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공제혜택(AMT)은 폐지해 부자증세와

감세정책을 병합한 조세정책을 제시한다. 그는 재정적자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감세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젊은 층이 주류인 샌더스 지지자들의 이러한 저항은 샌더스가 내세운 공립대학 학비 면제, 보편적 의료 보장 등 급진적인 공약의 이행을 통해 미국이 변하기를 간절히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힐러리의 사회 부문 주요 정책안**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 부문에서 빼앗긴 국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지난 30년간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드러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바마 케어’ 확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마리화나·낙태 합법화 추진, 공교육 강화, 사형제 폐지, 사법부의 인종차별 금지,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주요 사회 부문 정책으로 담은 민주당 정강·정책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정강·정책이 비록 대선 후보인 힐러리의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확정되었지만, 여기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급진적 진보 정책이 대거 반영되었다.

**| 버니 샌더스**

트럼프주의의 극단에는 스스로를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로 천명한 74세의 버니 샌더스가 있다. 그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상위 1%를 제외한 국민 99%에게 불리한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형 은행들을 해체하고, 메디케어를 단일보험자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바꾸고,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번 예비선거 후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샌더스는 젊은 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8-29세 젊은 층 4명 중 3명은 힐러리보다는 샌더스를 지지했다. 샌더스 본인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힐러리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으나, 샌더스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첫날에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둘째 날엔 힐러리의 후보 선출 확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100여 명이 대회를 나가기도 했다. 젊은 층이 주류인 샌더스 지지자들의 이러한 저항은 샌더스가 내세운 공립대학 학비 면제, 보편적 의료보장 등 급진적인 공약(표 1 참조)의 이행을 통해 미국이 변하기를 간절히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예비선거 주요 공약 비교**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1. 중산층 재건 - 최저임금 인상	1. 경제 취약계층 보호
2. 일자리 창출 - 여성 노동력 참여 장려	2. 교육정책 개혁 - 전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 제공
3. 장기 성장에 중점 - 단기실적 자본주의 지양 - 노동자교육 기업 지원	3. 무역정책 개혁 - 중국 및 저임금 국가로 사업 이전 금지
4. 월街 개혁 - Dodd Frank 규제 강화	4. 월街 개혁 - 대형은행 해체 - 추가 금융거래세 부과 - Dodd Frank 규제 강화
5. 의료개혁 - 약가 규제를 통한 의료비/약값 인하	5. 단일 보험자 제도 수립(국민의료보험) - 무상 의료검진 시스템 확대
6. 노동개혁 - 노동조합 지원 강화 - 노사이익 공유기업 지원	6. 노동개혁 - 전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 노동자 협동조합 창설 - 여성 노동자 임금 평등
7. 사회 안전망 강화	7. 인프라 투자 확대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재건
8. 세제개혁 - 고소득층 추가세율 4% - 단기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 인상 - 소기업 세금 감면	8. 실효세제 개편 - 자사주매입 규정 개혁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샌더스의 경선 포기 후 지난 6일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는 연소득 12만 5천 불 이하 가구 자녀의 공립 대학 학비를 전면 면제하겠다는 수정 정책안을 발표했다.

### | 좌측으로 더 기운 힐러리의 정책

높은 교육비를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샌더스는 월가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면 무상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힐러리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2년제 대학의 학비를 면제하고, 학자금 부채의 이자율을 낮추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75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학들이 학비를 낮출 수 있도록 권하겠다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았지만, 급진적 물결에 휩싸인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샌더스의 경선 포기 후 지난 6일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는 연소득 12만 5천 불 이하 가구 자녀의 공립대학 학비를 전면 면제하겠다는 수정 정책안을 발표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의 핵심 정책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민주당 정강·정책 작성위원 10석 중 4석을 샌더스 후보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움으로써 분열된 민주당의 단합을 꾀하면서 보다 급진적인 정강 채택을 허용했다.

### |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 29일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후보 수락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샌더스 덕에 사회·경제 정의가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되었다며, 샌더스가 추구하는 이념이 곧 나의 이념이라고 강조하고는, 그의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미국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정강 수립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함께 민주당의 정강을 작성했으니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샌더스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June, 2014,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 Pew Research Center, July 2016, “2016 Campaign: Strong Interest, Widespread Dissatisfaction”
- “Why are Americans so angry?,” BBC News, 4 February 2016
- “미리보는 2016년 미국 대선 [1]” Korea Strategy, 2015.10.22
- “US election 2016: Bernie Sanders’ and Hillary Clinton’s policies compared,” BBC News, 28 February 2016
- “Hillary Clinton Embraces Ideas From Bernie Sanders’s College Tuition Plan,” The New York Times, July 6, 2016